

경기북부지역 산업재해 ZERO를 위하여

변화하는 시대의 안전관리

2024. 4. 3.(수)

경기북부지사



목차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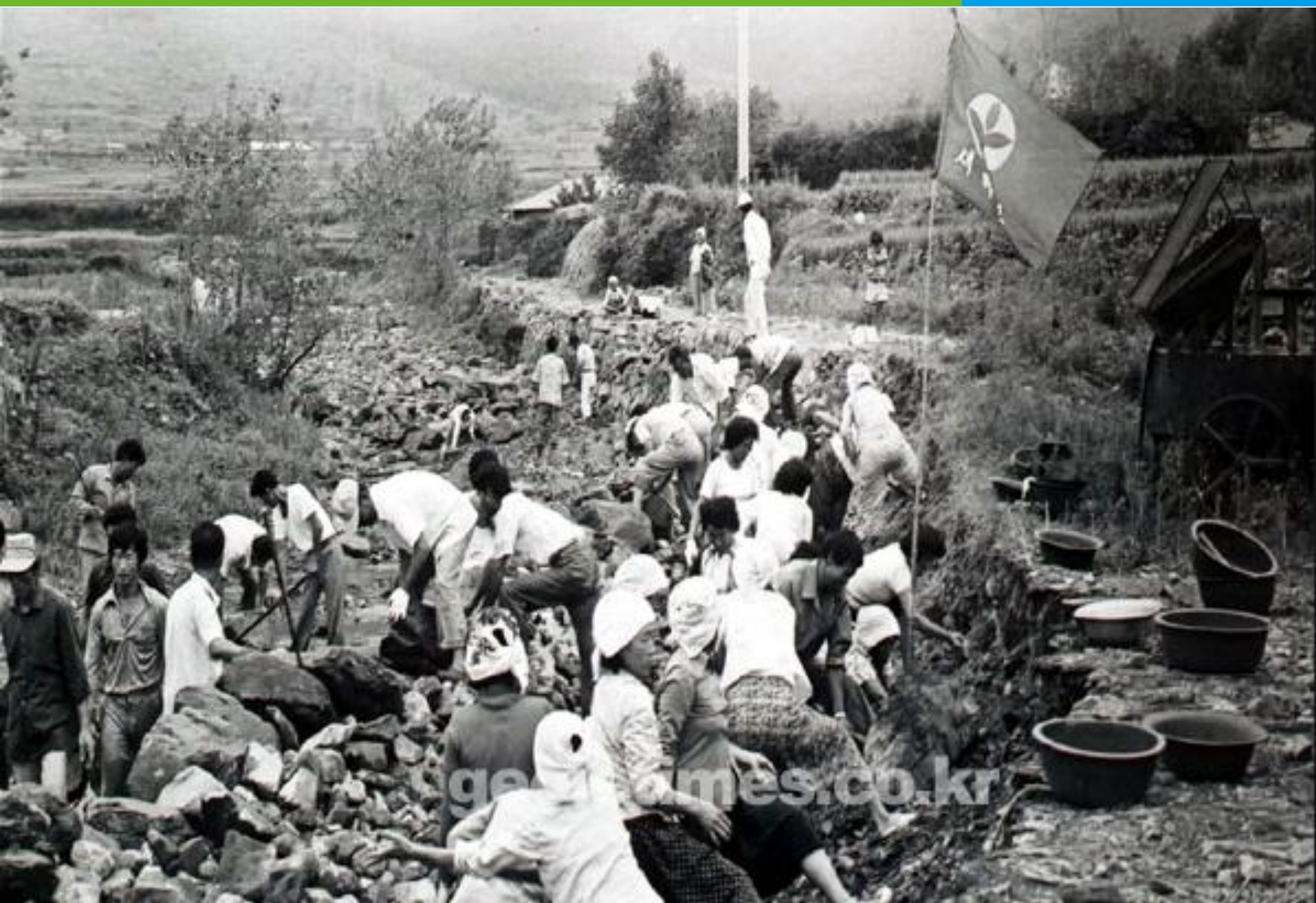
- I 2024년의 현 주소
- II 지금까지의 흐름
- III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쟁점
- IV 안전보건관리체계
- V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VI 생각해 봐야 할 것들



2024년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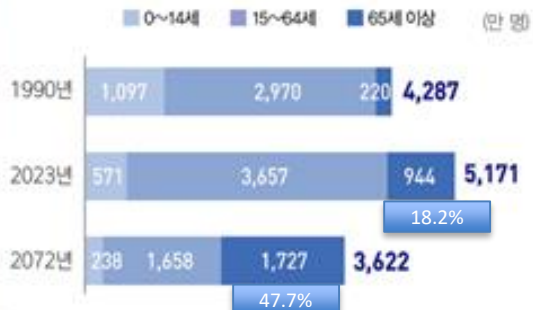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인구 및 가구·가족

총인구



가구원수별 가구 수



합계출산율



건강 및 생활환경

기대수명



사인별 사망률



현재 흡연율 및 월간 음주율



교육·훈련 및 노동

사교육 참여율



고용률 및 실업률



근로여건 만족도



소득·소비·자산 및 여가

GDP 및 1인당 GNI



월 평균 소비지출액



여가활동



주거 및 범죄·안전

인구 1,000명당 주택 수(2022)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및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범죄율



사회통합 및 주관적 웰빙

사회갈등인식(2023)



사회적 고립감



삶의 만족도(2023)



우리나라의 위상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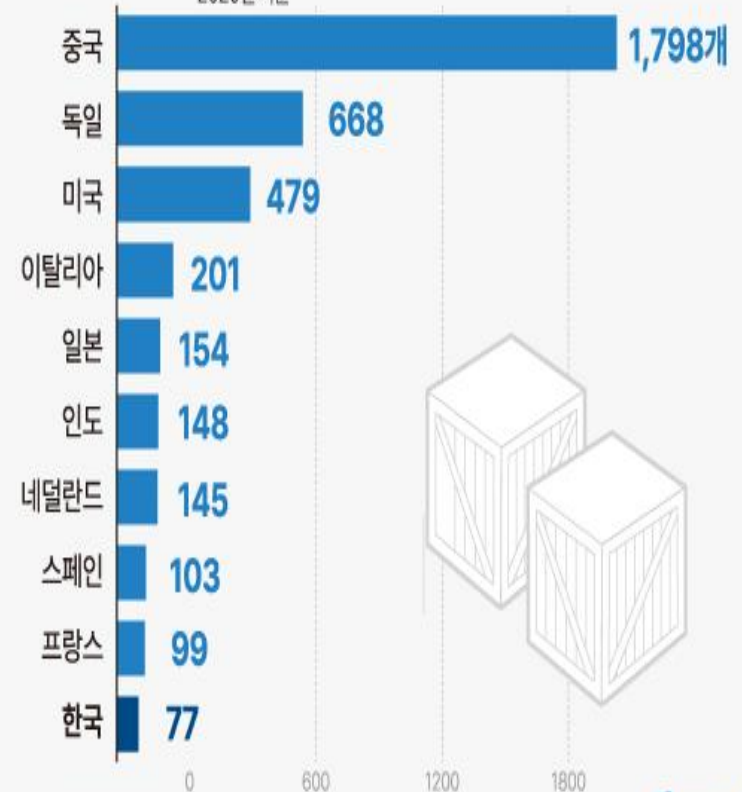
▶ 세계 GDP 순위 알아보기

2023년 현재 1위 미국, 2위 중국, 일본 경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뉴스를 접했음에도 3위 일본입니다. GDP 순위 대한민국 10위로 확인됩니다.

국가	GDP(국내총생산)
1위 미국	22조 9,961억
2위 중국	17조 7,340억
3위 일본	4조 9,374억
4위 독일	4조 2,231억
5위 영국	3조 1,868억
6위 인도	3조 1,733억
7위 프랑스	2조 9,374억
8위 이탈리아	2조 998억
9위 캐나다	1조 9,907억
10위 대한민국	1조 8,102억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보유 상위 10개국

2020년 기준



자료/한국무역협회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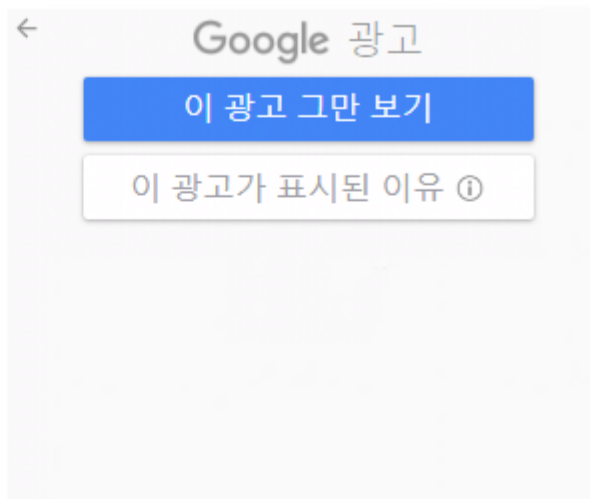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많은 국민총저축을 보유하고 외국인 투자도 많이 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며 “최근 몇 년간 한국 국민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했고 이 나라의 상류층은 돈을 ‘이름있는’ 상품에 쓰는 데 열심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사회의 강점으로는 건강보험제도와 중학교까지 제공되는 의무교육을, 과제로는 고령화를 언급했다.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는 미국 1위, 중국 2위, 러시아 3위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독일, 영국, 한국, 프랑스, 일본,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순으로 조사됐다.

USNWR은 매년 세계 85개 나라의 1만7천 명에게 정치·경제·군사력 등을 비롯한 국가영향력들을 물어 발표한다. 김환 기자

USNWR은 “한국의 첨단 기술과 서비스 기반 경제는 성공적 외국투자의 사례”라며 “OECD개발원조위원회의 첫 수혜국에서 지원국이 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강력



가장 강

최근 국가 순위가 발표되면서, 이 순위가 발표된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에서 새해 첫 일출을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상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우리나라의 위상

안전을위한
우리를We한

OECD 국가 삶의 만족도 TOP11

(2019~2021년)

출처: UN SDS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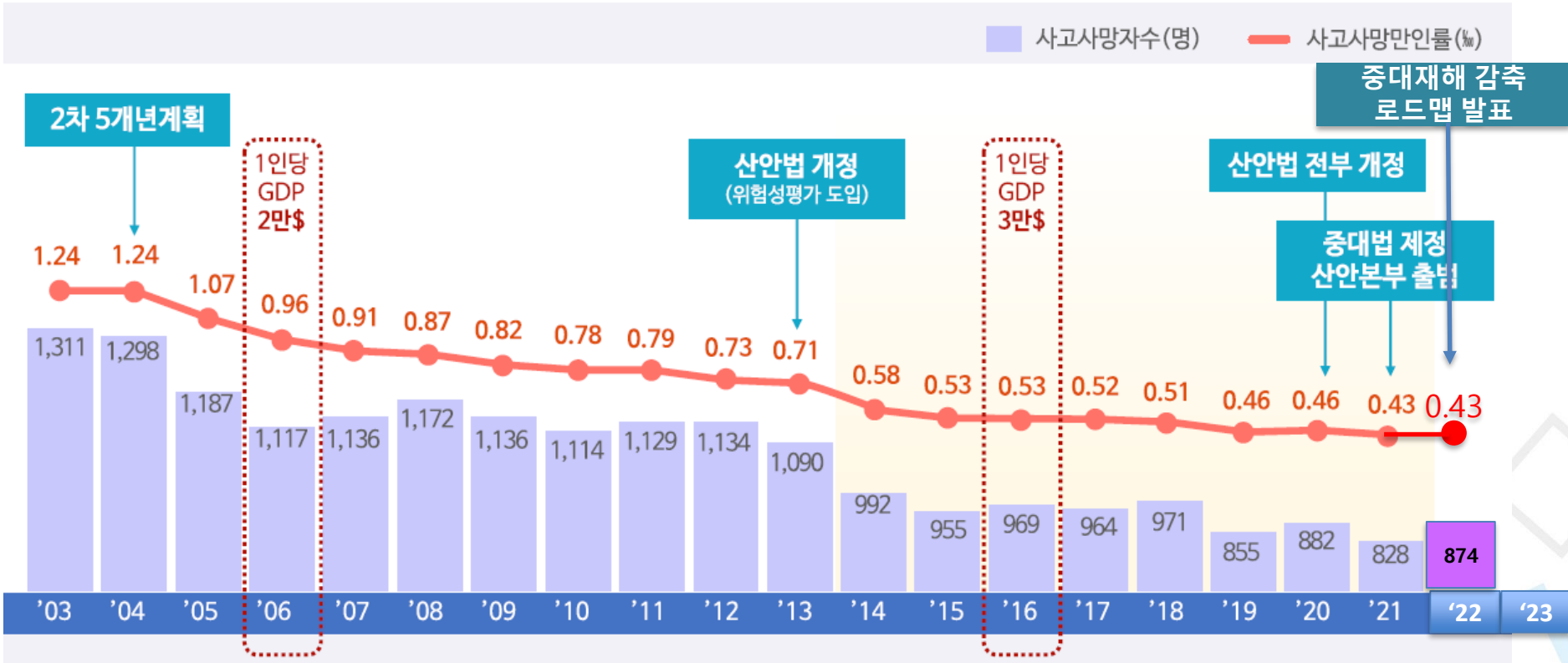
순위	국가	점수(점/10점)
1위	 핀란드	7.8
공동2위	 덴마크  아이슬란드	7.6
4위	 스위스	7.5
공동5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뉴질랜드	7.4
...		
15위	 미국	7.0
...		
33위	 일본	6.0
...		
36위	 한국	5.9
37위	 콜롬비아	5.8
38위(꼴찌)	 튀르키예	4.7



사고사망의 현 수준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매년 800명 이상 사고 사망 (9년째 사고사망만인율 0.4~0.5수준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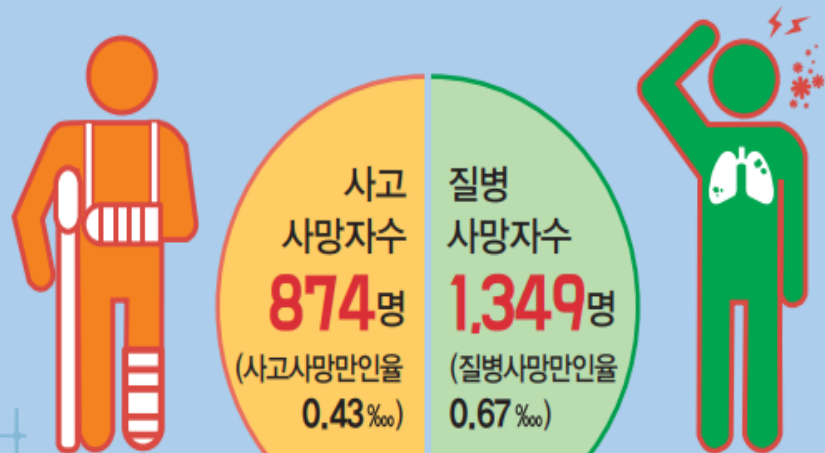


○ 국민소득 2만달러('06.)에 1.0‰ 미만 진입, 3만달러('16.)에 0.53‰ 경제 발전에 따라 감축되었으나, 현재는 정체기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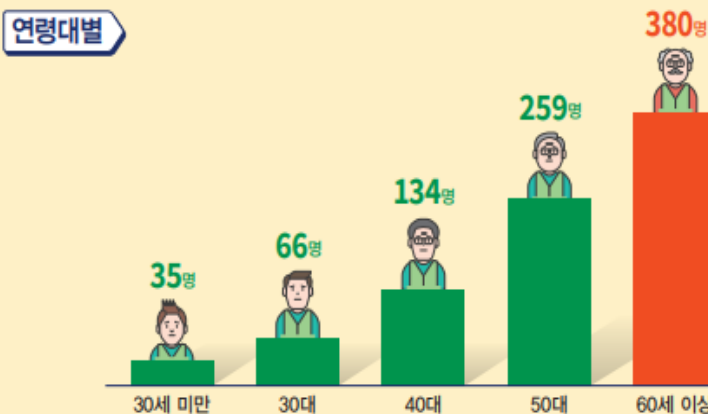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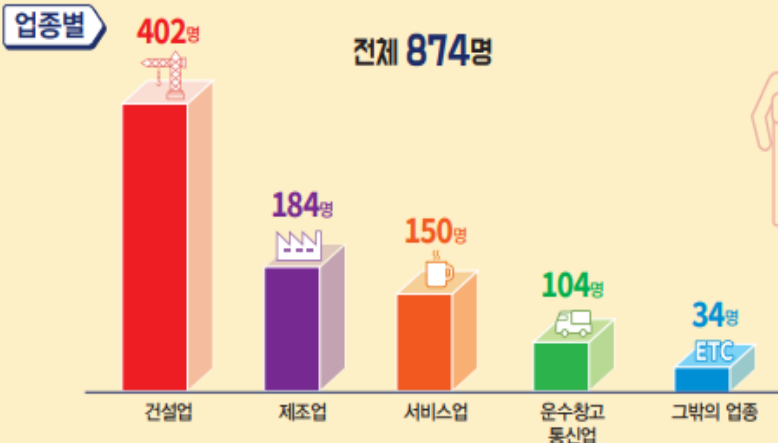
재해자수 **130,348명**
(재해율 0.65%)

사고재해자수
107,214명
(사고재해율 0.53%)

질병재해자수
23,134명
(질병만인율 1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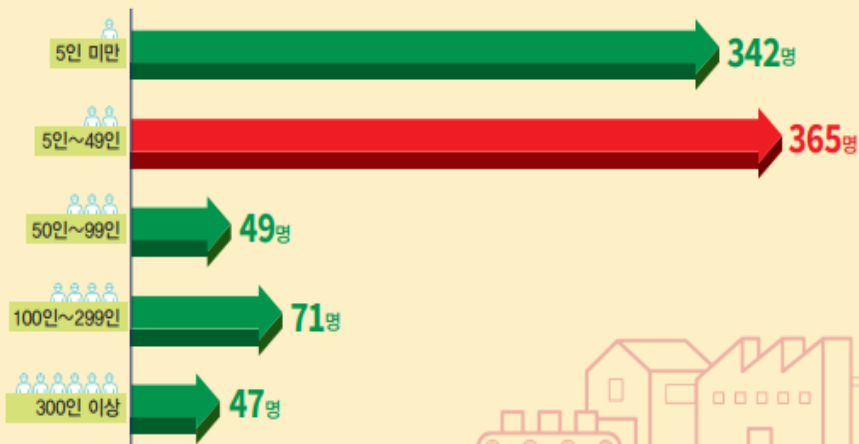
사망자수 **2,223명**
(사망만인율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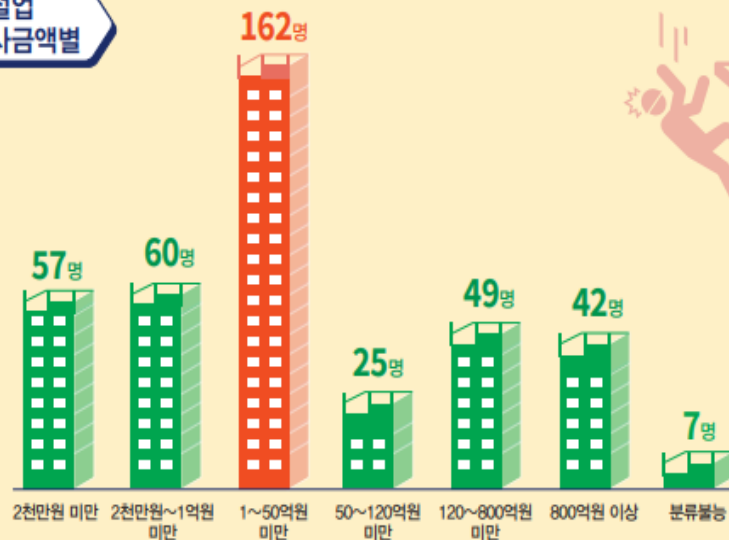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2022년 사고사망자

행정구역별 2022년 사고사망자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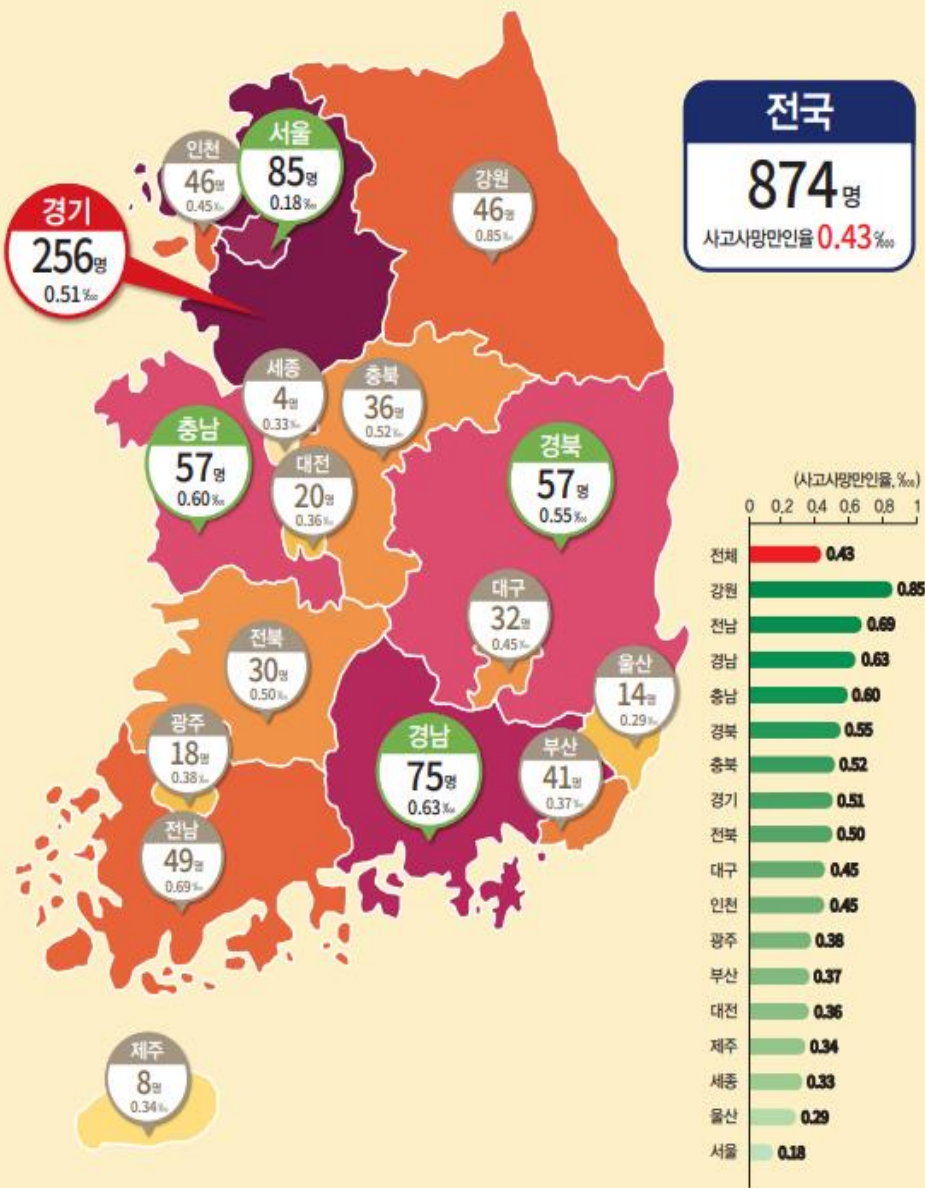
건설업
공사금액별



전국

874명

사고사망인원율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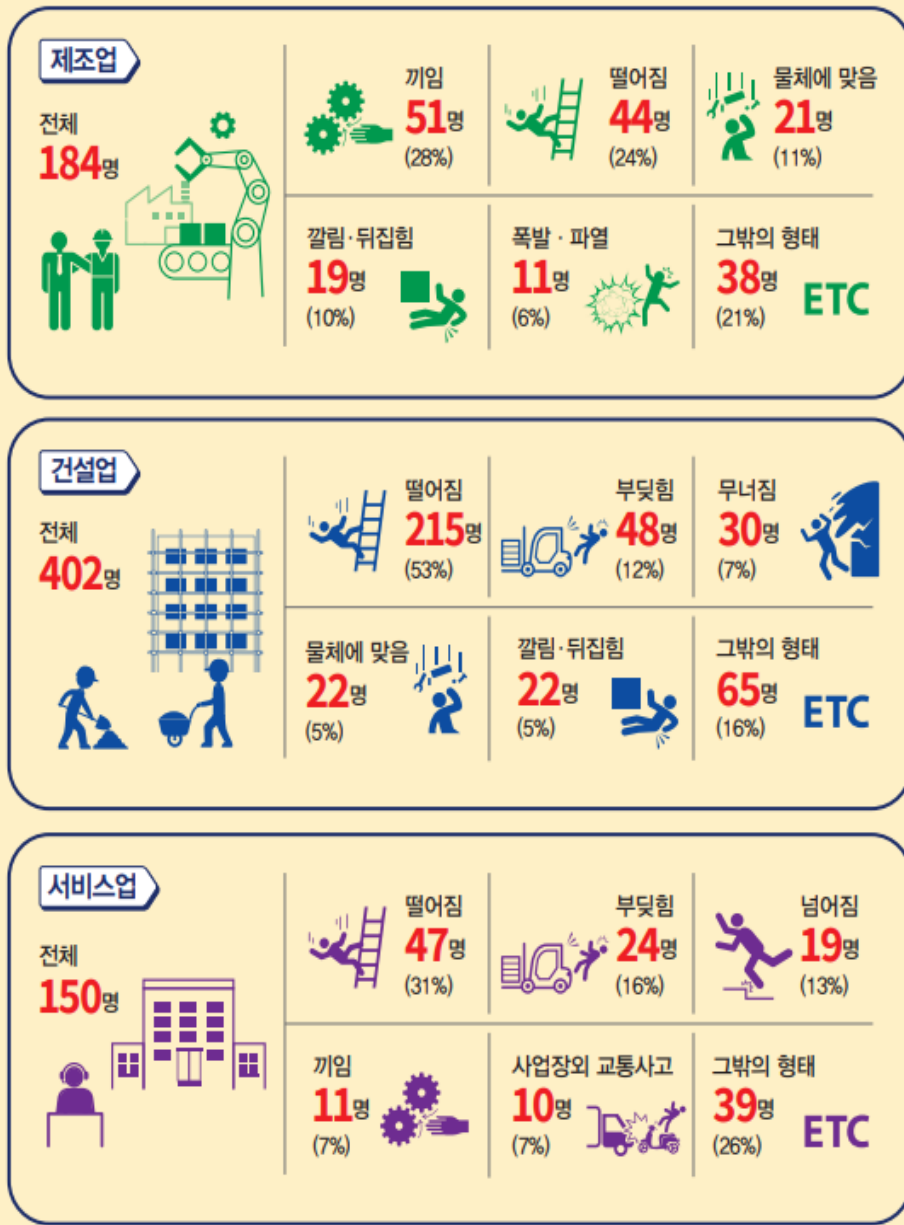


발생형태별 2022년 사고사망자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다지불편혁신

주요 3대 업종별·발생형태별 2022년 사고사망자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다지불편혁신



사고사망자 최다 발생 유형

46.0%



건설업

41.8%



5~49인 사업장

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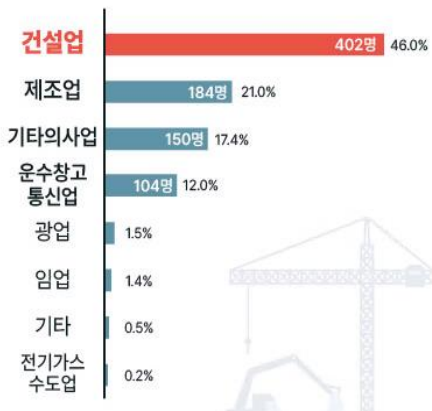
60세 이상 근로자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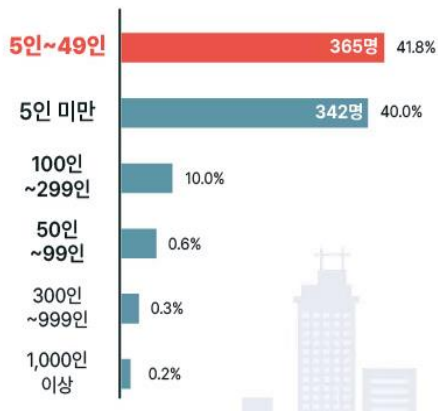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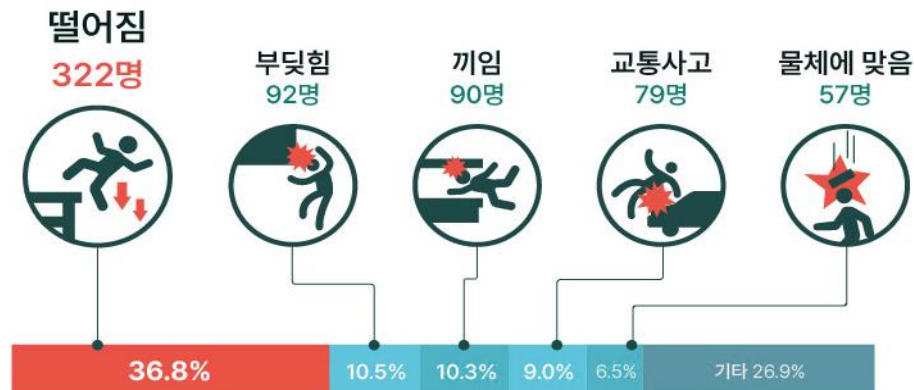
업종별



규모별



재해유형별



사고사망의 현 수준

안전을위한
우리를We한

우리나라 사고사망 현황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 '22년 사고사망자 874명, 만인율 0.43‰로 OECD 38개국 중 34위

→ 영국의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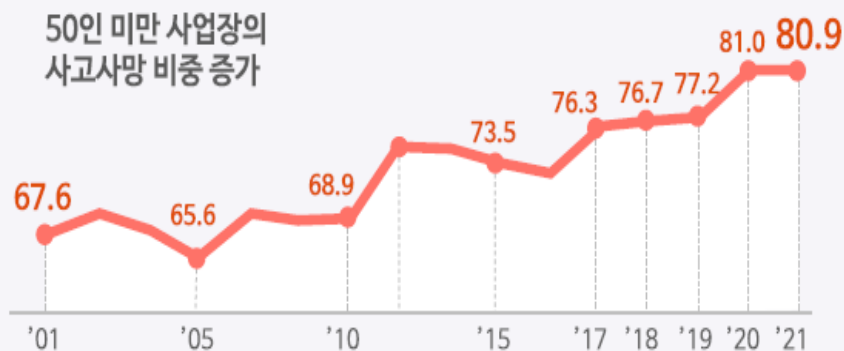
* 영국 0.34('74.), 독일 0.42('94.), 일본 0.46('94.) vs 한국 0.43('22.)

사고사망의 현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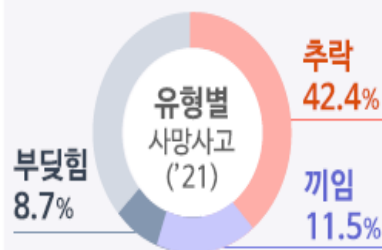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원·하청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다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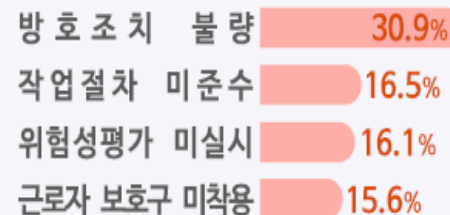
구조 소규모·하청사업장, 건설·제조업 위주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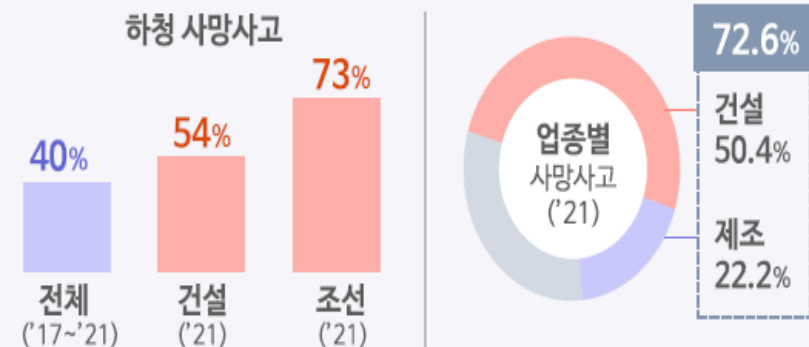
형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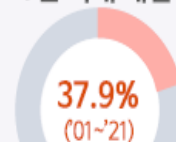
사고 원인('21)



분포 재발사고 빈번, 취약계층에서 사고 다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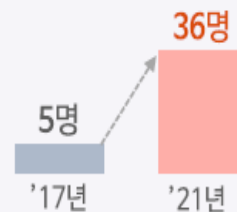
재발사고 중 첫 사망사고 발생 후 1년 이내 재발



55세 이상 58.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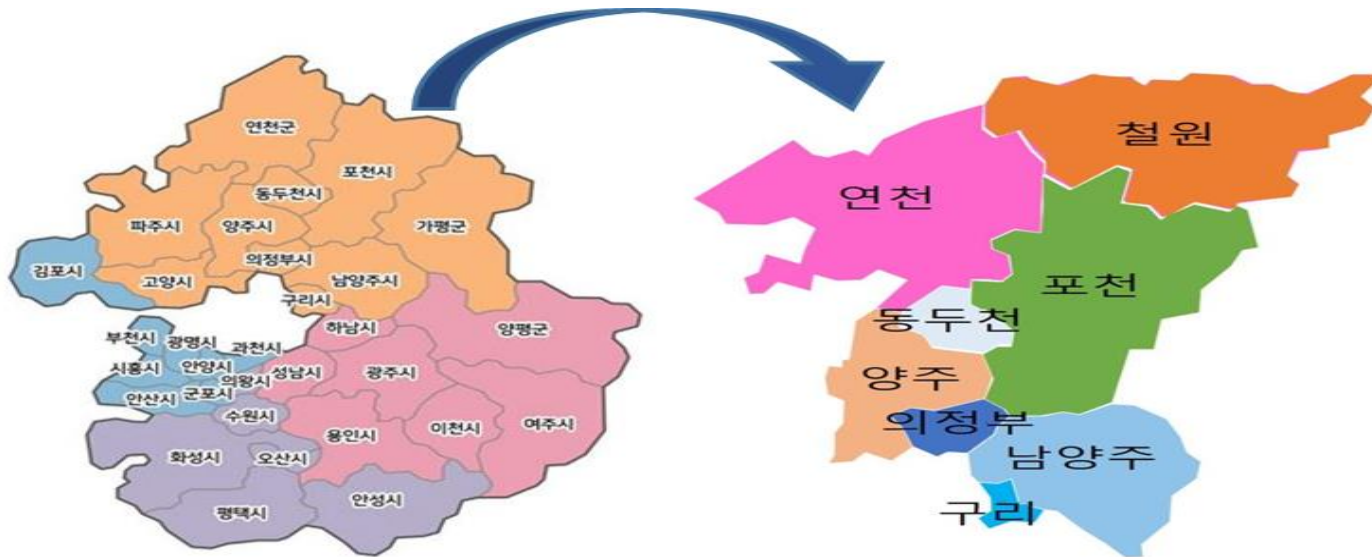


특고 사고사망



경기북부지역의 특성

사업장[개소]	근로자[명]	인구[명]
109,626	562,512	1,967,594



○ (관할구역) 의정부시를 포함한 8개 시군으로 구성

-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 경기도 면적의 33.1%(3,372 / 10,199km²), 인구의 14.4%(1,967천명/13,630천명) 점유

※ 서울 전체 면적(605km²) 대비 5.6배에 달하는 큰 관할구역

경기북부지역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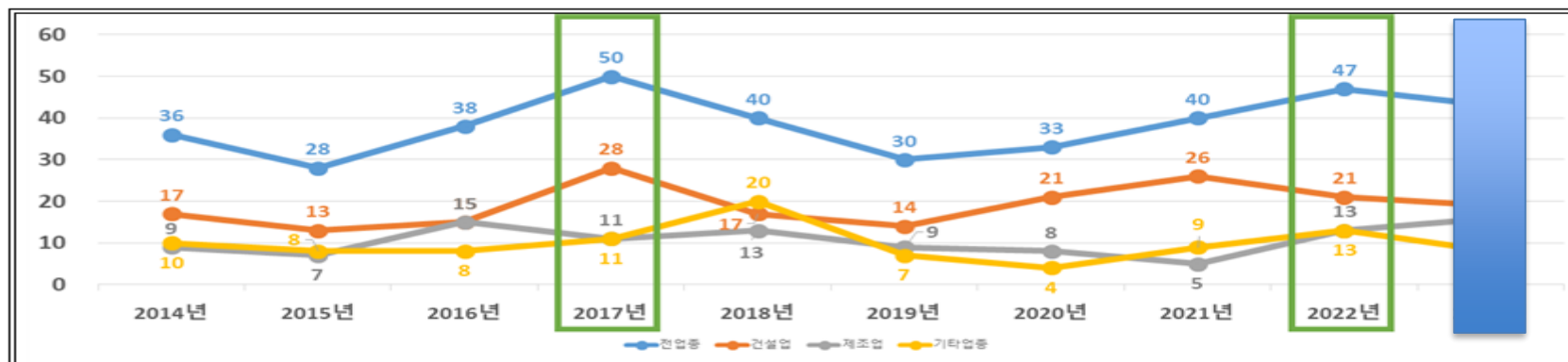
- **(환경변화)** 신도시 개발, 교통상황 개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입지조건 등으로 **10년간** 관내 사업장 및 근로자수는 **소폭 증가 추세**,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사업장 수는 **12.8%**, 근로자수는 **28.0%** 감소

구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제조업		건설업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2023년	109,626	562,512	20,135	115,785	13,822	77,691
2014년	72,308	430,983	14,936	104,683	15,855	108,357
비고	37,318 ↑ (51.6%)	131,529 ↑ (30.5%)	5,199 ↑ (34.8%)	11,102 ↑ (10.6%)	2,033 ↓ (12.8%)	30,666 ↓ (28.3%)

※ 지난 10년간 전국 사업장수는 41.1%, 근로자수는 23% 증가

경기북부지역의 사고사망 현황

안전을위한
우리를We한



○ (변화추이)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자는 총 385명으로 연평균 39명 발생 하였으며, 건설업 191명(49.6%), 제조업 106명(27.5%), 기타업종 98명(25.5%) 순으로 발생, '22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 예상

- 건설업('21년 이후) 감소 추세, 제조업('21년 이후) 증가 추세
- 지역별로는 남양주시 96명(25.3%), 포천시 89명(23.5%), 양주시 83명(21.9%), 의정부시 39명(10.3%) 순으로 발생
- 사고사망만인율은 10년간 0.08‰ 감소('14년 0.84‰ → '23년 0.76‰)

※ 외국인은 총 59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15.3% 점유, 특히 '23년 11명(25.6%) 발생으로 증가 추세

경기북부지역의 사고사망 현황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사고재해율 전국 1위
(0.79%)

사업장수
전국 11위
(109,626개소)

근로자수
전국 13위
(562,512명)

사고사망 만인율
전국 2위
(0.76‰)
사고사망자
4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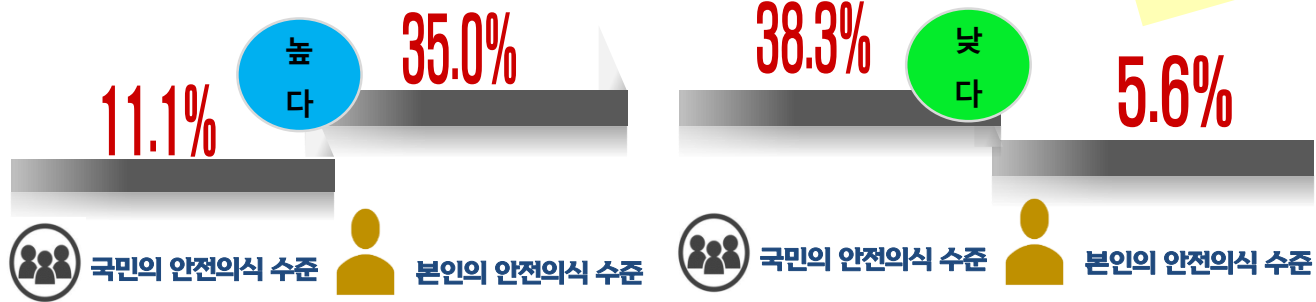


국민의 안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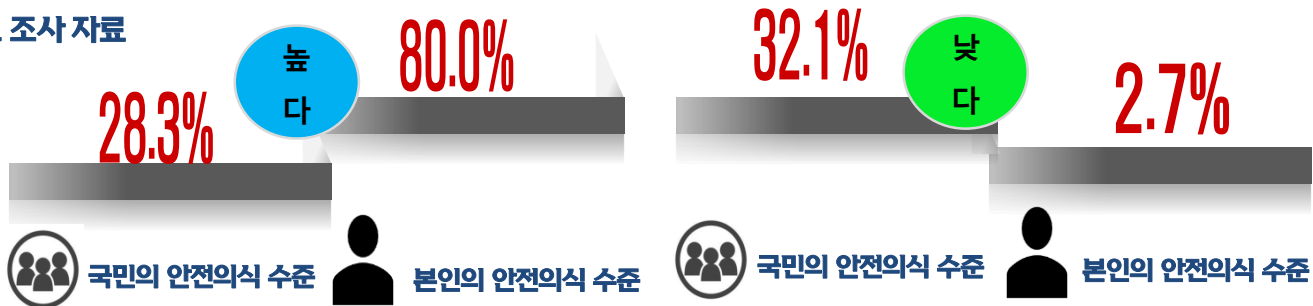
안전을위한
우리를We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의식에 대한 현황

2008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



2022년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안전문화수준 향상도 조사 자료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79.7점) vs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59.2점)



우리의 높은 시민의식, 낮은 안전의식.....

- 산업화 이후 안전문화수준 형성 시기
- 선진국은 산업화 이후 100~150년 지나
- 우리는 불과 40년 밖에 안되는 형성시기
- 빠른 경제성장에 비해 낮은 안전마인드

지금까지의 흐름

구의역 사고 (2016. 5. 28)

안전을 위한
우리를We한



8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열차에 부딪혀 숨져

태안 컨베이어 사고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2018년
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사고



또 잊혀져간다... 돈도 힘도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



2020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

38명 사망
10명 부상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안전을위한
우리를We한

⚙️ 개정 사유(배경)

-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등장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보호강화와 함께
- ➔ 안전보건조치 의무 주체를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까지 확대 할 필요

⚖️ 산업재해 예방책임주체 확대(5조)

사업주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 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하여

»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 확대(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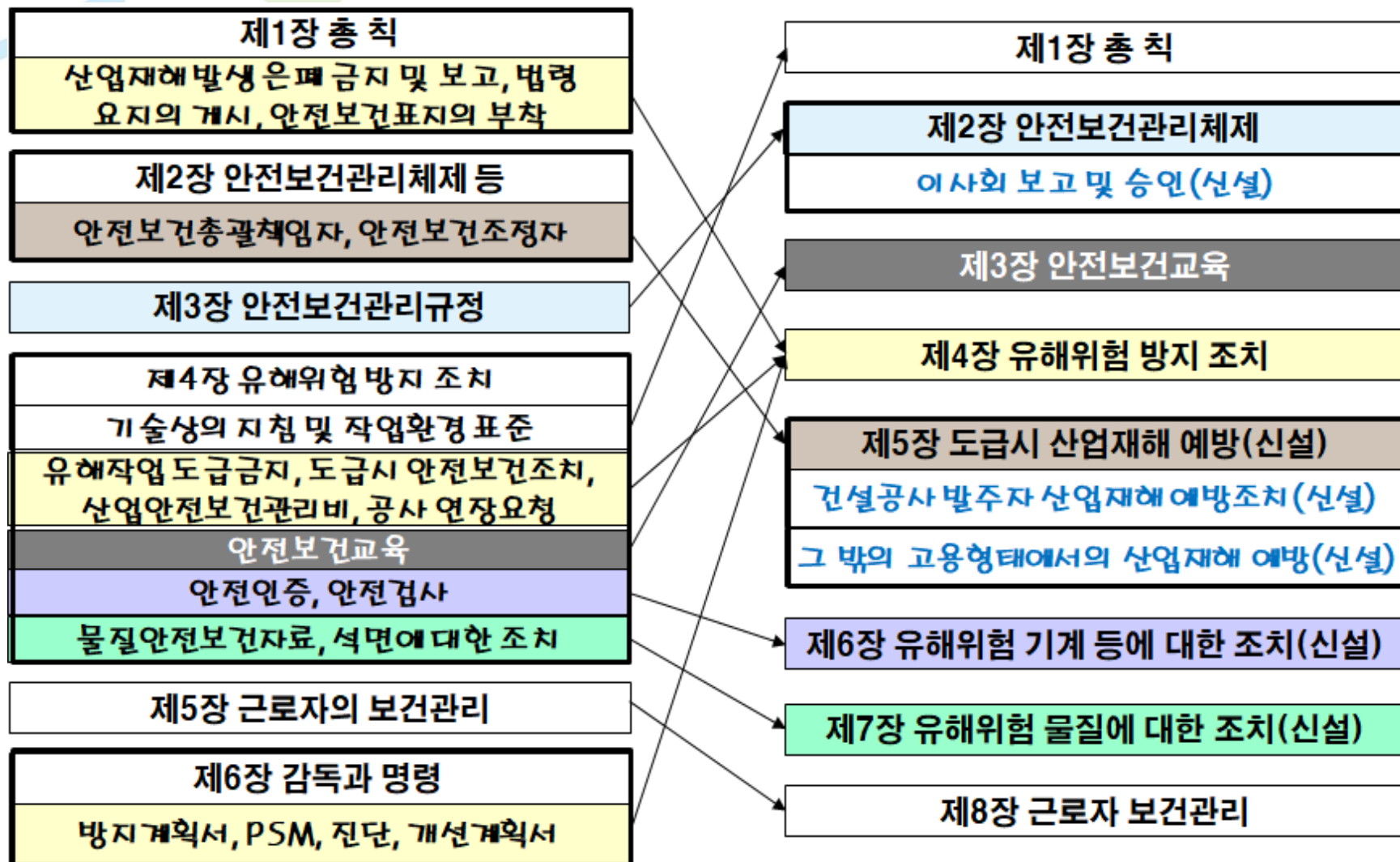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을 「(종전)근로자→(개정)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였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 마련



개정된 산안법 구성체계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6)

안전을 위한
우리를We한

'20. 5월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산업
재해

반복되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사망사고 지속

시민
재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4.16
세월호 사건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종사자 및 일반 시민의 안전권 확보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 차원

법제정 목적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 하는 것

처벌규정의 목적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
-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질을 높이라는 메시지

산업재해와 과징금에 대한 이야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쟁점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산업안전보건법

(2019.1. 전부개정)

현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 → **현장 실행력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2022.1. 시행)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에
책임을 묻는 법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산업안전
보건법

+

중대재해
처벌법

=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보건조치

기계·설비나 위험 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

- 예) 폭발성 물질 제조 시 방호조치 등

원재료·가스·위험작업 등에 대한 보건조치

- 예) 5kg 이상 중량물 안내표시, 손잡이 부착 등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의 현장 관리·감독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 이행 관리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기준 마련]



24가지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

- ①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 물질, 금속가공유 등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1~13호)
- ② 렙토스피라증,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14~24호)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전을위한
우리를We한

처벌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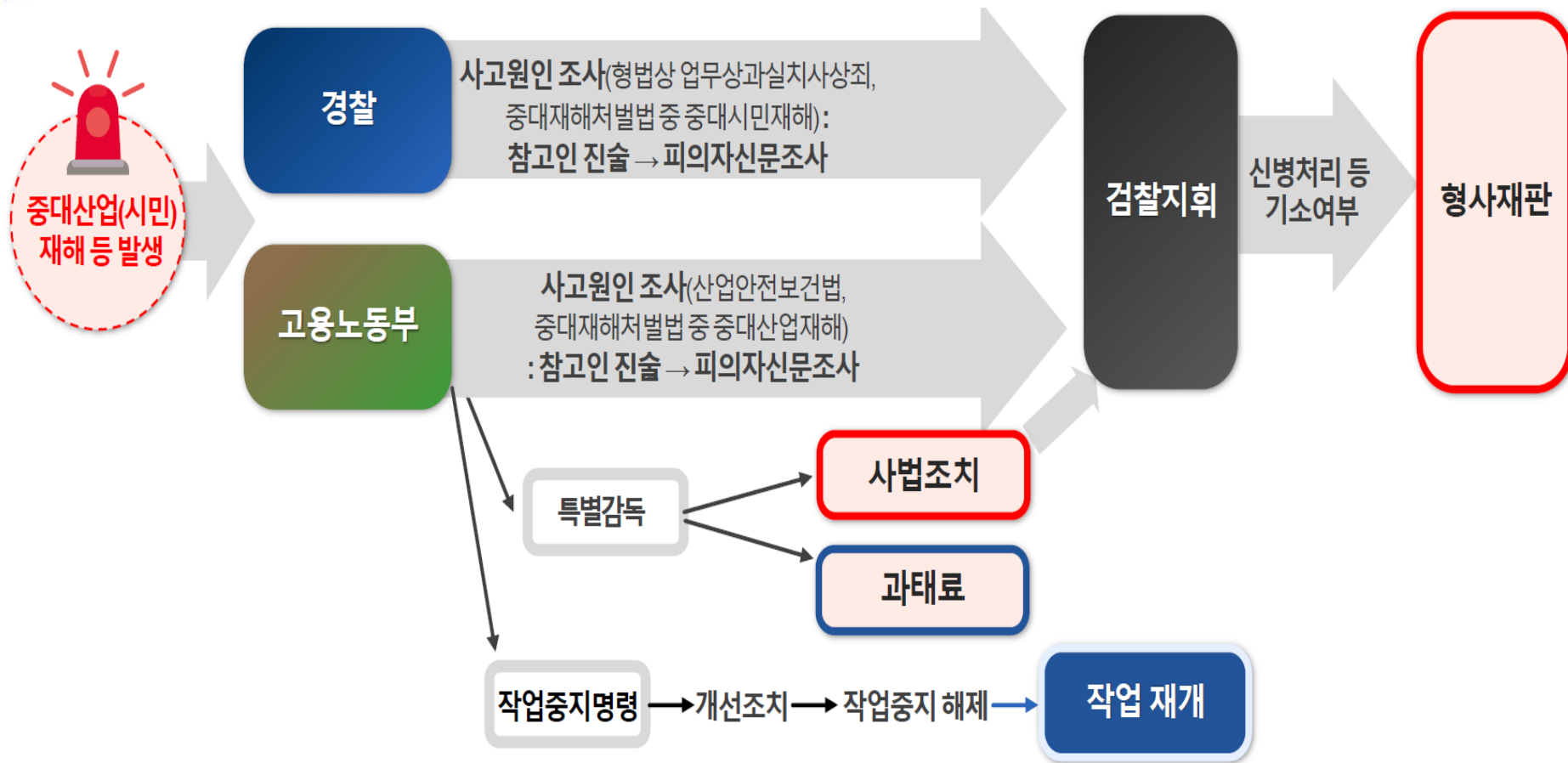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2. 1. 27.)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4. 1. 27.)



중대재해 발생 시 진행 흐름

안전을 위한
우리를We한





창

- 경영책임자 등 해당 여부
-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발생 여부
-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불이행 여부**
- 불이행에 대한 인식 여부
- 행위자 특정
- 비난가능성
 - 반복된 재해 / 경고 무시
 - 조치의 난이도
 - 위험의 외주화



방패

입증의 문제 : 사실상 입증책임 전환

안전을위한
우리를We한

결과의 발생

관리감독 의무 이행 부실의 추정

”

적극적 자료 제출

1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관한
적극적인 실시와 자료 구비

- 안전교육 이수 확인 기록, 사진
- 안전조치, 교육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2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통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증빙

-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적 증빙

채석장 3명 사망... 삼표 '중대재해법 처벌 1호' 되나



매몰자 수색작업 펼쳤지만...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매몰자 3명 중 구조당국이 마지막까지 찾지 못했던 1명이 이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삼표산업이 '1호 처벌 기업'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소형형 제공



[2보] 창원서 급성중독 16명...중대재해법 적용 첫 직업성 질병

송고시간 | 2022-02-18 09:11

| 노동부, '급성중독' 두성산업·'폭발사고' 여천NCC 본사 압수수색

고용노동부

같은 '중대재해법' 위반했는데, 검찰 기소여부는 같았다 왜?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 나왔다...창원 두성산업서 16명
급성중독

입력 2022-02-18 09:35 수정 2022-02-18 10:00



두 사업장 모두 트리클로로메탄(유해물질) 함유된

동일 세척액을 사용하다가 근로자 집단 독성감염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내 3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

두성산업은 '중처법' 1호 기소

대흥알앤티는 '산안법 위반'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 차이 발생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책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인정)



[직업성 질병 관련] 두성산업 vs 대흥알앤티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매일노동뉴스

2024-04-02

[대흥알앤티 불기소 이유서 보니] '독성 간염' 같은데 검찰은 '형식적 조치'만 하면 무혐의

검찰은 지난달 27일 노동자 16명이 올해 2월 독성 간염을 일으킨 경남 창원시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의 대표 A(43)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해물질이 들어간 세척제 사용으로 노동자 13명이 직업성 질병을 판정받은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의 대표 B(65)씨는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건조치미이행) 혐의만 적용됐다.

검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판단

7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B씨가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대흥알앤티는 올해 2월 '전처리 세척공정'의 국소배기장치 풍속이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도포공정'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독성 간염에 걸렸다. 하지만 검찰은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거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검찰은 △유해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재해예방 예산 편성 여부 등으로 나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4조3호)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확인·개선이 이뤄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험 소지 중대재해법... “선례·법원 판단 쌓이면 나아질 것”

내달 법 시행 1년... 논란 여전

산업현장 안전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다음 달 시행 1년을 맞는다. 입법 취지를 살리기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초반부터 위험성 논란에 휩싸여왔다. 법 조항이 모호해 처벌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반면 올 한 해 쌓인 기소 사례들로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 수는 6건이다.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31건 중 7건이 처리됐는데 6건이 기소, 1건이 불기소 종결이었다.

그중 ‘1호 기소’ 사례였던 두성산업이 위험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 두성산업은 지난 2월 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환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성산업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1항1호와 제6조

2항이 위험적이라고 주장한다. 제4조 1항1호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6조2항은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있

“법 조항 모호... 처벌 예측안돼”

“기준 구체화, 선부른 평가 일러”

“올해 6번 기소사례 쌓이면서
혼란상황 탈피했다” 목소리도

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라는 내용 등이 불명확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피고인 측 논리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된 처벌 조항 역시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우려는 이 법의 제정 때부터 있어 왔고, 여러 로펌에서 관련 해설서를 펴내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업주 입장에서 정확히 어떤 조치

들을 취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위험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헌법소원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시행 첫해 6번의 기소 사례가 축적되면서 혼란 상황은 탈피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선박 수리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달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어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겼는지 세세히 명시한 바 있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없었으며 하도급업자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지적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사법처리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컨대 종사자 의견 청취와 개선책 마련 부분의 경우 ‘매진저나 아침회의에서 언제든지 의견을 듣는다’는 형식적 항변은 통하

지 않을 수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 시행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이라며 “선례와 법원

판단이 좀 더 쌓이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4.6)

안전을위한
우리를We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호 판결 선고

□ 중대재해 개요

'22. 5.14. 고양 덕양구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원청인 A사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약 16.5m)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하여 사망

□ 주요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



* B사는 도급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1. 甲, A사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아래와 같은 3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청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③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2. 乙, 丁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규칙상 조치 미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5층(16.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3. B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 丙 :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4.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호 판결 선고

□ 각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

1. 甲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 A사 : 벌금 3천만원
3. 乙, 丁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B사 : 벌금 1천만원
5. 丙 : 벌금 5백만원

□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지한 사과
- A, B사가 3억 3천만원 상당의 보험금 및 합의금 지급

2. 안전난간 임의 철거가 피해자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 피해자를 포함한 앵글 작업팀이 중량물을 수월하게 건물 내부로 인양하기 위해 개구부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 상단 봉을 해체하여 작업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며 재발 방지 다짐

4.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거나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경미한 전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2호 판결 선고

□ 중대재해 개요

'22. 3.16. [redacted] 제강 사업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

□ 주요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

(주) [redacted] 제강 (상시근로자 340명)

대표이사 A (안전보건총괄책임자)

[redacted] 산업 (상시근로자 4명)

개인사업주 B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 상주하며
설비 보수 작업 실시

* 협력업체 [redacted] 산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4.27)

1. A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한 아래의 2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하청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②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 아래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하청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①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② 안전한 중량물 취급 용구를 마련하고 그 손상 여부를 수시 점검

③ 크레인 이용 중량물 인양 시 중량물과 근로자 사이에 안전거리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4.27)

안전을위한
우리를We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2호 판결 선고

2. B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 아래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①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 ② 안전한 중량물 취급 용구를 마련하고 그 손상 여부를 수시 점검
- ③ 크레인 이용 중량물 인양 시 중량물과 근로자 사이에 안전거리 확보

3. (주) [] 제강 : 대표이사 A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 규정

☐ 각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

1. A : 징역 1년(법정 구속)

2.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3. (주) [] 제강 : 벌금 1억 원

☐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및 피해자 유족의 선처 탄원
-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과태료 자진 납부
- B의 경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불리한 사정(A의 경우)

- 2010년 검찰청-고용노동부 합동점검 시 벌금형
- 2020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사고예방감독 시 벌금형
- 2021. 5. 24. 산재 사망사고 발생으로 벌금형
- 2022. 3. 16. 이 사건 산재 사망사고 재발생

안전보건관리체계

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조치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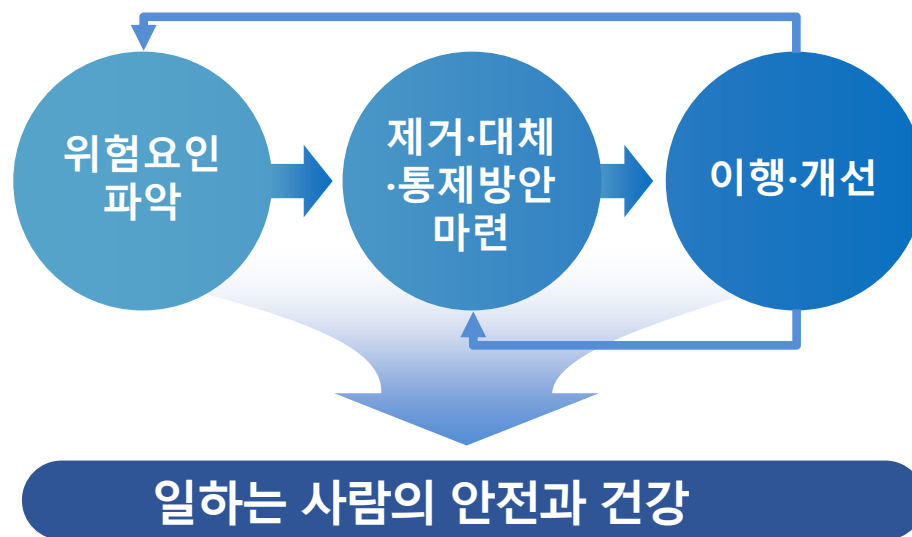
* 1,4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위임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이행



왜 지키지 않는 것일까? 지킬 수 없는 걸까?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어야 함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차선으로 안전보건 규정들이
사업내 지휘체계나 업무방식, 근로형태와 결합되어
수행될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이 다르므로 여건에 맞게 구축

✓ 기술 역량 및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업

➔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

✓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

➔ 공식적·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스템

산재예방을 위한 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Tool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KOSHA-MS, ISO45001

활동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

개선

이를 이행하고,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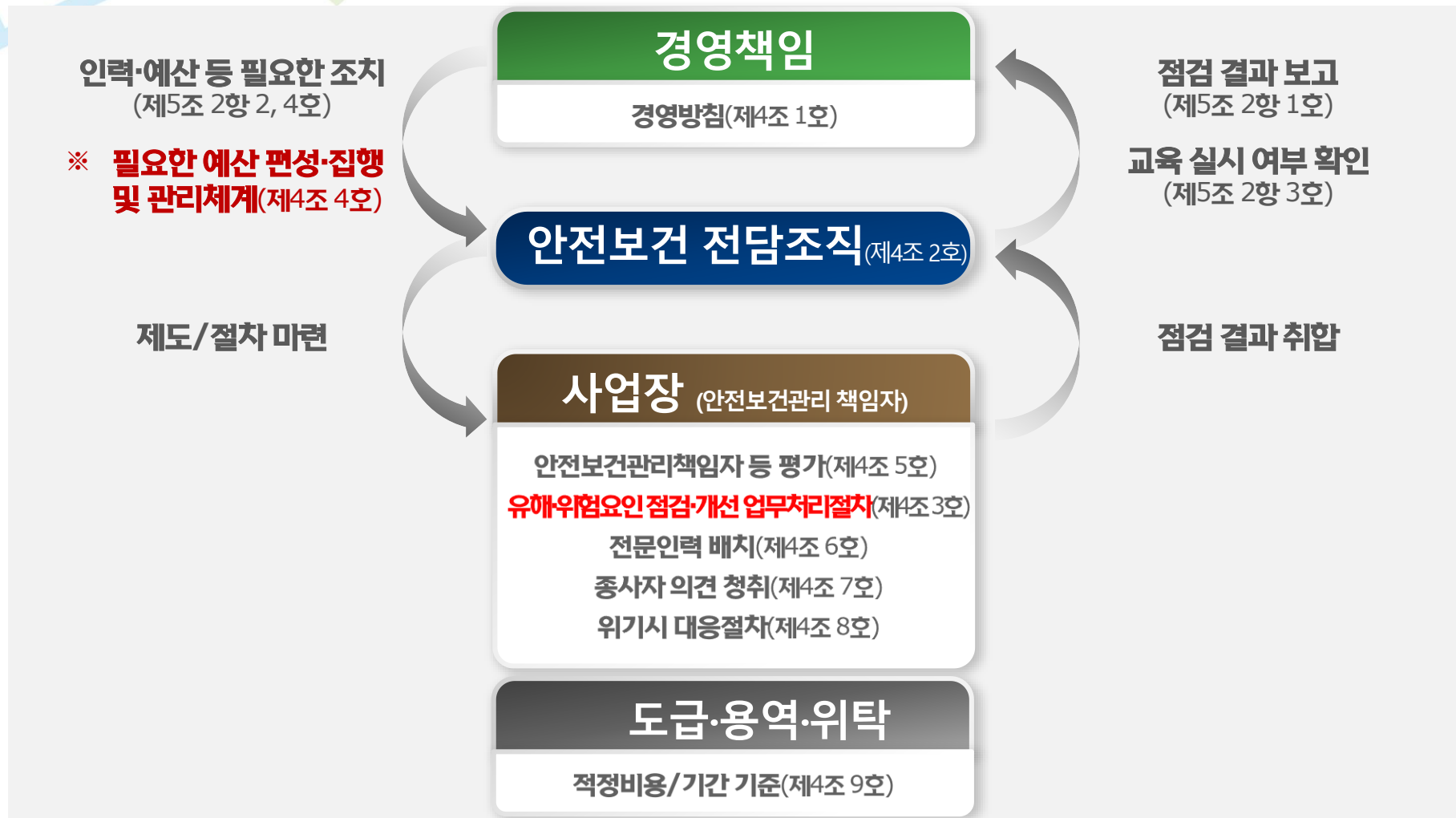
안전보건관리체계 7대 핵심요소

안전을위한
우리를We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모델

안전을위한
우리를We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2년)

기업·산업특성에 맞는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형성 미흡

기업 자율 예방 체계 형성 미흡

- 기업 자체적 위험요인 개선 시스템과 역량 빈약
- 안전보건 역량 강화 보다는 처벌 회피에 집중
- 과거와 발생한 재해와 같거나 유사사고 재발
- 기업에 공유 및 활용되지 못하는 정부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보고서'

여전히 미성숙한 안전의식·문화

- '생산' 우선 관행, 전 사회의 '안전을 보는 눈' 취약
- 안전의식·문화 활동- 단발성의 캠페인 위주
- 안전보건 교육- 획일적인 내용과 방식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감독·행정

- 산업안전보건법령 - 낮은 현장 수용성
- 산업안전감독 - 위반 사항 적발과 처벌에 중점
- 위험성평가 - 기업 66.2%가 미 실시
- 민간 기술지도- 법 위반사항 위주, 공급자 중심 지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

- 관리자 등 일부 특정인만이 책임이 있다고 인식
-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 부가적 요소로 치부
- 근로자의 '의무'로서의 인식 부족
- 원·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 불명확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안전을위한
우리를We한

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 자기규율예방체계 뒷받침 위한 감독행정, 법령·기준 정비



②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50인미만 80.9%

중소기업
집중지원

건설·제조 72.6%

스마트기술·장비
중점 지원

추락·끼임·부딪힘 62.6%

8대 요인
현장중심 특별관리

하청 40%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새로운 위험

산업구조 및
기후변화 대비

③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참여 강화
-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중앙-지역-업종)
- 현장 중심 안전보건교육 강화

④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 전문기관 간 연계 협업
- 응급의료 비상상황 대응체계
- 중앙-지역 협업·거버넌스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방지” 중심
- 미실시,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벌칙 신설

2023년
300인 이상

2024년
50~299인

2025년
5~49인



위험성평가 확산 및 실행력 제고

평가
방식

-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 개발·보급

재발
방지

-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 공적자원으로 활용

근로자
참여

- 쏘 단계 노·사 참여 및 협업 강화

현장
공유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성화
- 월-주-일 3단계 상시 공유체계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뒷받침하는 법령·기준, 감독·행정 개편



법령·기준 정비

- 안전보건 기준규칙 현행화
- 예방 vs 처벌규정 분류
⇒ 예방규정은 고시·가이드 제정
-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제재방식 개선 등 강구

⇒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 운영('23.上)



감독·행정 개편

- 정기감독은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
- 중대재해 발생시 엄중한 결과책임 부여
 - 사고원인 엄정 수사
 - 동종·유사업종 재발방지 위한 기획감독
 - 산재은폐 기획 감독



중소기업 취약분야 집중관리

안전을위한
우리를We한

[규모]
50인 미만

80.9%



중소기업 집중지원

-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종합 지원

안전보건
기초진단

기초
컨설팅

시설 개선
지원

심층
컨설팅

- 맞춤형 시설·인력 지원 강화
- 산업단지 특화 공동 안전보건관리자 지원
-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 신설

[업종]
건설·제조

72.6%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지원

-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예방 지원

AI카메라

인공지능 인체감지

추락보호복



- ‘Safe&Smart Factory’ 신설·지원
⇒ 설비·장비 제작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 내장 유도
- 근로자 안전확보 용도 CCTV 설치 제도화



중소기업 취약분야 집중관리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사고유형]

추락·끼임·부딪힘

62.6%



현장 중심 특별관리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특별관리

-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 끼임 방호장치, LOTO (Lock-Out, Tag-Out)
-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 핵심 안전수칙 지도·교육, TBM 상시 위험 공유
- 8대요인 중심 스마트 안전장비 공급
- 안전수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원·하청]

하 청

40%



원하청 상생협력

원·하청
역할기준

안전보건
상생협력

Safety
ESG 경영

-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확대
(’22년 5억 ⇒ ’23년 99억)
- 산업안전 공시(지속가능경영보고서)
⇒ Safety ESG 경영 촉진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참여 강화

책임

- 안전보건 '주체' 역할 및 안전수칙 준수 의무 명확화

참여

- 근로자 작업중지 활성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가 위촉 유도
- 근로자 안전개선 제안 활성화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중앙 '노사정 안전일터' 공동 선언

지역 '안전문화실천 추진단' 운영

업종 위험요인·시기별 특화 캠페인



현장중심 안전보건교육 강화

학령기 초·중·고·대학 단계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구직자 직업훈련시 안전보건교육 포함

근로자 현장 TBM 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 인정

CEO 안전보건교육 기회 제공(50인미만 소기업)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산재예방 전문기관 기능 재조정

민간 재해
예방기관

-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 육성

안전공단

- 중소기업 지원 기능 강화
- 위험성평가제 전담 조직 신설

중앙-지역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

지역

지자체, 업종별 특화 예방사업 추진

협의체

광역단위 안전보건협의체

지방관서-지자체-안전관리자' 네트워크

⇒ 현장근로자까지 정책·제도 전달

비상 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 정비

초동조치

CPR 교육,
AED 보급

현장
비상대응

「현장비상상황
대응 가이드라인」

응급처치
진료

응급실·
외상센터 확보

일터복귀
지원

지역 외상체계 구축,
산재병원 재활센터

→ '26년까지 사업장 내 CPR 가능자 50% 이상

중대재해 상황 공유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



산업안전비서
(전국민)



교통사고 전광판
(전국민)



지역 유관 기관
연락망 先 구축



산재예방
종합 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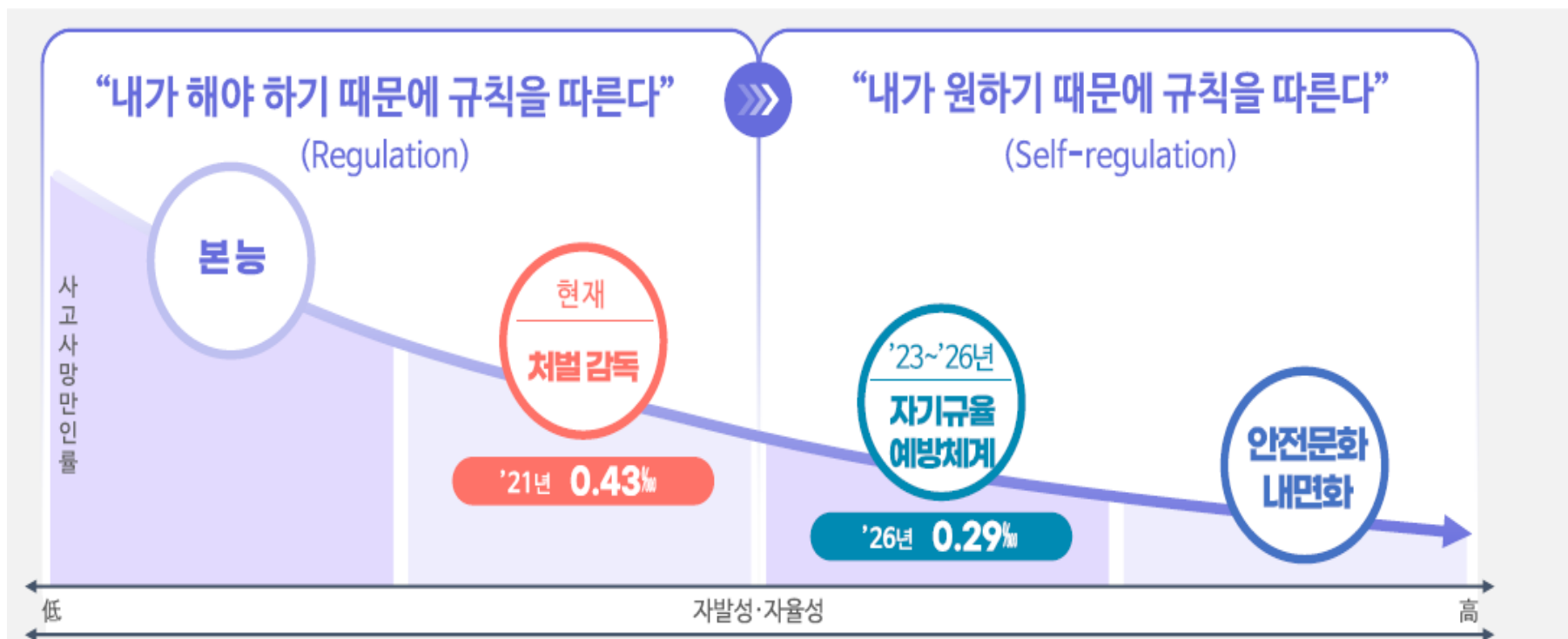
지원사업, 예방정보,
사고속보·분석 등



기대효과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로드맵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 충실히 이행 시, '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감축
➔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처벌·감독’ 단계를 넘어 ‘자기규율’ 단계에 진입, ‘안전문화내면화’ 지향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안전을위한
우리를We한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기업(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왜 해야하나요?

-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온라인) PC·모바일로 접속하며, 접속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하세요.

1단계

(PC)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http://www.kosha.or.kr>
(모바일) 우측의 QR Code 스캔



2단계

누리집에 표시된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



-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 ☎ 1544-1133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진행 되나요?

대진단 실시

- 자가진단표 (10개 항목)
- 온·오프라인 진단



대진단 결과

-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 확인
- 대진단 결과 확인



안전개선 노력

- 정부 지원 신청 (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 등)
- 자체개선



대진단 상담·지원

-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운영
- 맞춤형 지원

산업안전 대진단,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첫째,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전문화와 안전의식

✓ 안전문화 개념의 이해

- “안전을 실천하는 **의식(S/W)**,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H/W)**, 안전을 유도하는 **제도(System)**”가 결합해 만들어 내는 **사회적 문화적 산물**
- 조직문화의 하위문화로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관점’
- 조직 구성원의 ‘**안전한 행동을 유도**’ 하는 것

✓ 안전문화의 구성요소

- 안전의식[S/W]: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의 활동 속에 체질화된 상태
- 안전제도[System]: 안전한 활동을 이끌어내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 제도** 등
- 인프라[H/W]: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한 **시설물** 및 안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 (예,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안전문화의 3대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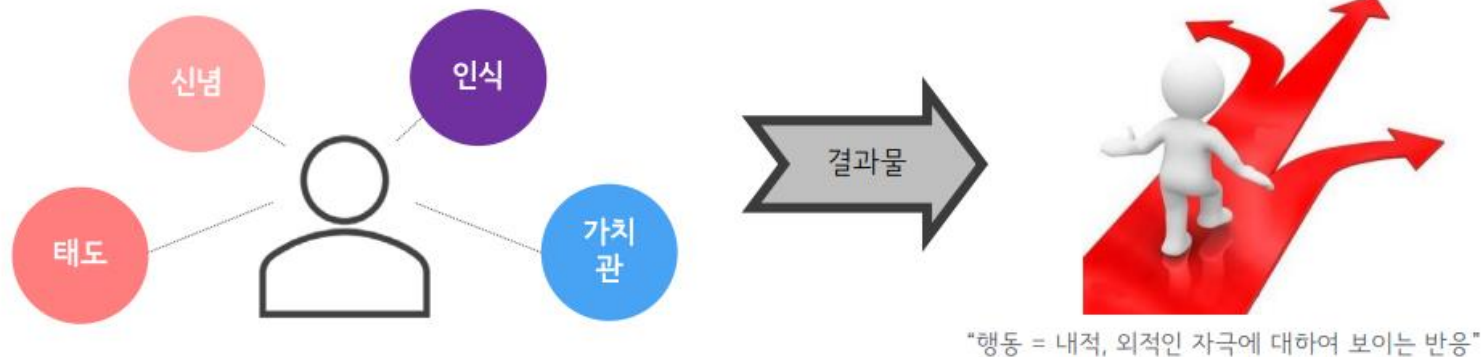
안전문화와 안전의식

✓ 의식(意識)

-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
- 사회적 ·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개인적 · 집단적 감정, 견해 혹은 사상

✓ 안전의식이란?

: 구성원이 안전에 관하여 공유하고 있는 태도 · 신념 · 인식 · 가치관을 통칭하는 개념(shared value)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안전문화 사업의 효과

“안전을 기업문화로!” DUPONT의

평균 재해율은 0.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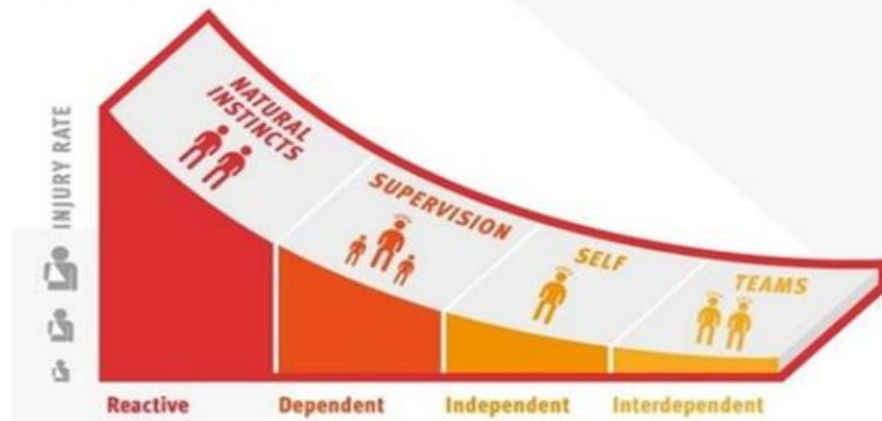
미국 산업계 전체 재해율 2.15%의 1/60 수준



SAFETY RESOURCES

DUPONT BRADLEY CURVE

Designed to help clients understand and benchmark the journey toward world-class safety performance, this proven, proprietary system has helped enable safety success within DuPont, and for our clients around the world, since 1995.



[DUPONT™ 브래들리 커브]



압축성장과 위험추구 경향

안전 → 속도

내실 → 외형

과정 → 결과

부가비용 → 비용절감

Mindset 기회 상실
안전문화 미성숙

안전문화의 현 수준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4/4/2024



강제하면 잘 할 수 있음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4/4/2024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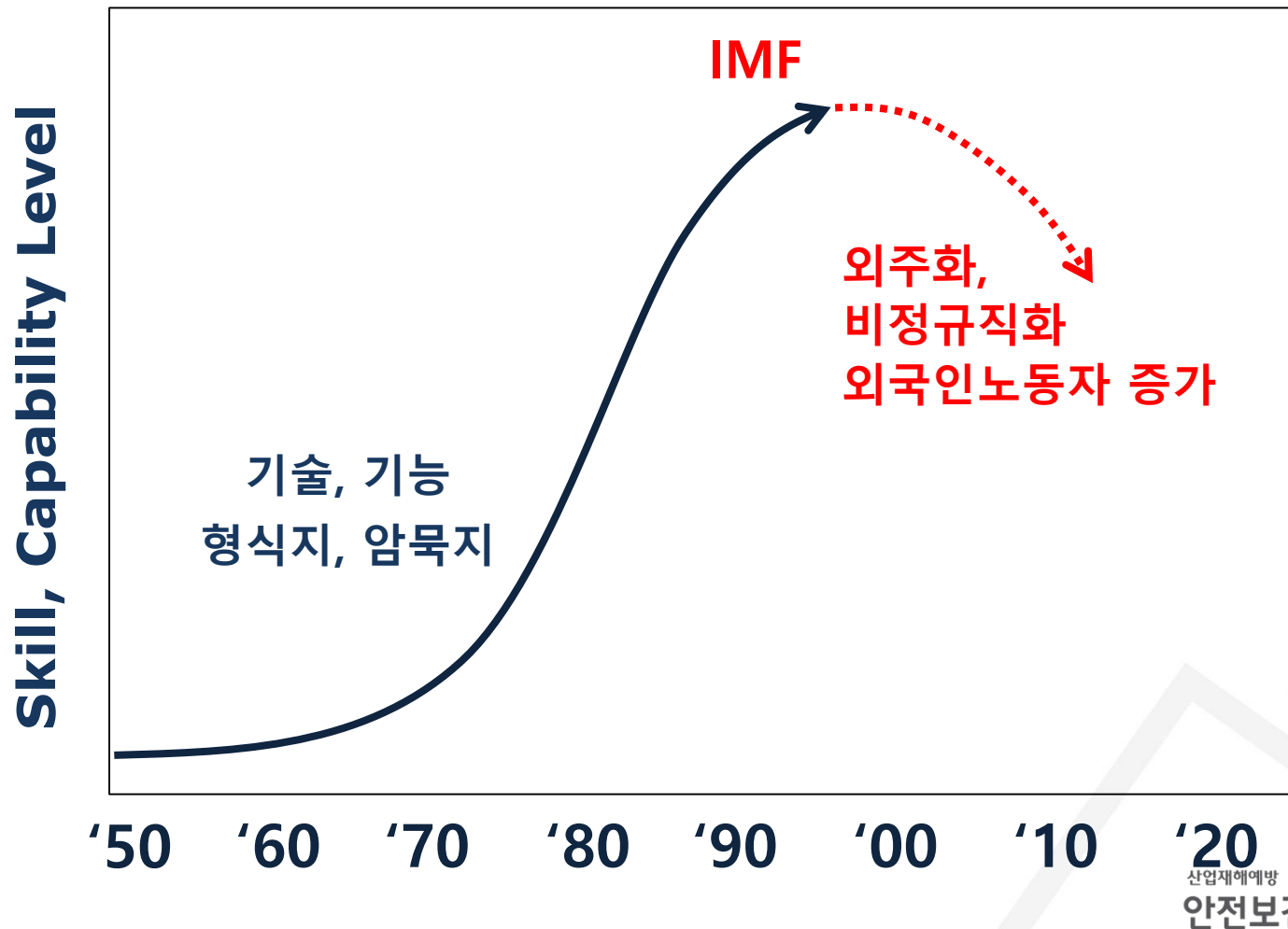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 위험의 수준은 점점 높아짐

→ 대형화, 복합화, 집적화, 고도화, 노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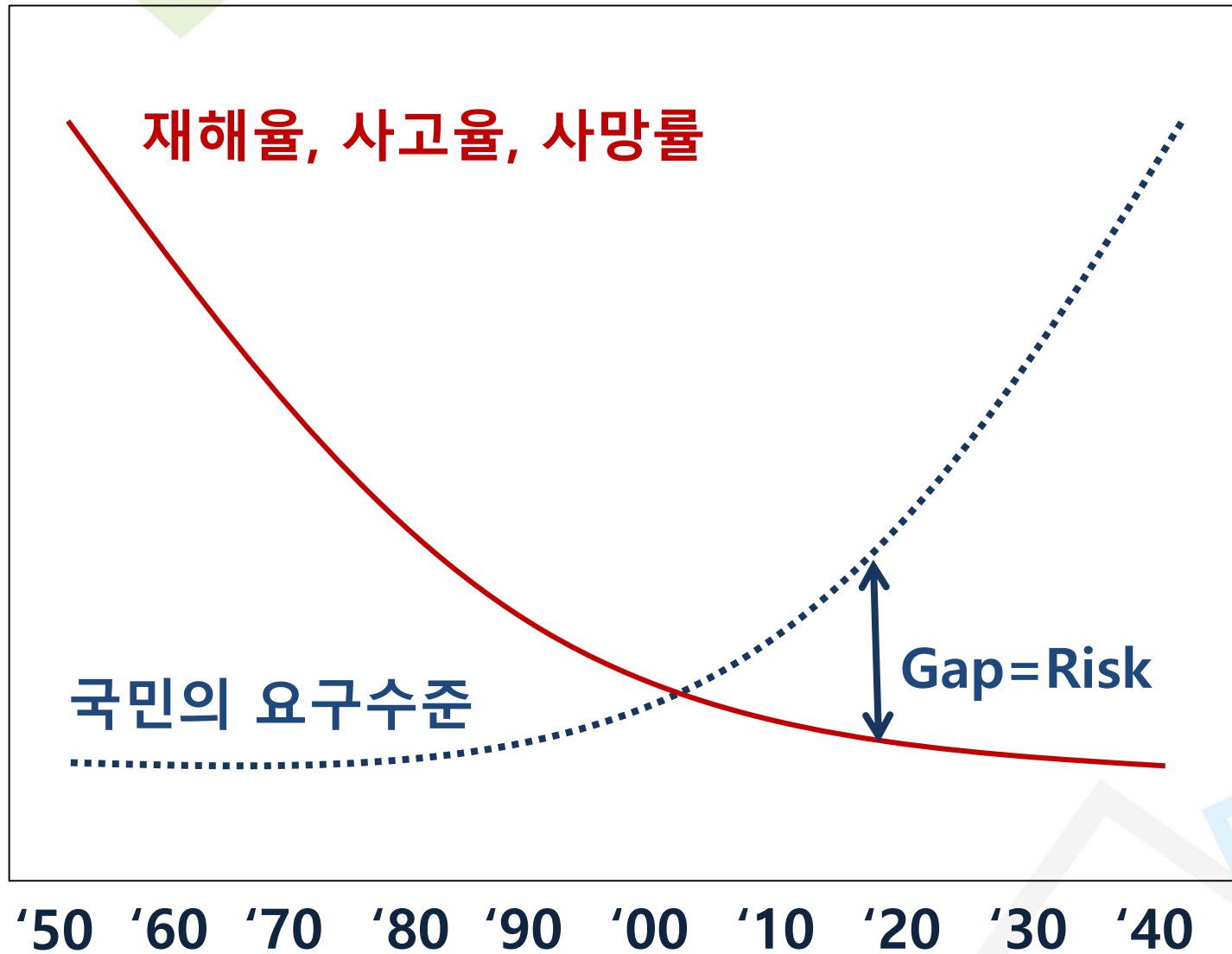


- 현장 기능/기술인력의 파편화
→ 종신고용 신화 → 비정규직화, 하청화



GAP을 어찌하나

안전을위한
우리를We한



주요 사고

산재 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입니다!

안전^한을 위한
우리를 **We**한



감사합니다

